

일본경제연구센터의 아베노믹스 영향 예측

일본경제연구센터가 아베노믹스의 3대 이슈인 ①대담한 금융정책_대폭적인 금융완화 ②역동적인 재정정책_공공투자 확대 ③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성장정책_신성장동력 강화에 대해 평가한 내용을 소개

* 이 자료는 쓰보우치 히로시(坪内 浩) 일본경제연구센터 주임연구원이 2013년 4월 8일자 「일본경제신문 경제교실 : 민에 의한 시장창조 중시」에 기고한 내용을 요약, 정리한 것임

① 무제한적 금융완화를 통해 현재의 물가하락 기조를 상승국면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가능한가?

□ 2%물가 상승을 2년 이내에 달성하는 것은 무리

- 일본경제가 향후 ‘①엔/달러 환율이 1달러=95엔 선에서 유지 된다 ②평균주가가 14,000엔까지 상승 한다 ③ 공공투자 연5조엔 증액 등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계속 된다’ 고 가정하고 거시모델로 검증해보면, 물가상승률 2%를 달성하는 것은 10년 후에나 가능
 - 물가를 좌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급밸런스인데, 물가상승률을 2%로 하려면 현재의 3%정도의 공급초과를 4%정도의 수요초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됨
- 임금인상에 의한 물가상승도 기대하기 어려운데, 임금은 실업률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이 강하고, 임금이 1%상승하려면 실업률이 3%대 중반까지 떨어져야 하나 앞에서 말한 거시모델 검증으로는 2020년 정도가 되어야 실업률이 3%대 중반까지 떨어질 전망

② 확대 재정정책을 통한 지방 경제와 내수시장 활성화는 가능한가?

□ 일본의 정부부채를 감안하면, 재정정책에 기대하는 것은 위험

- 일본의 정부부채는 선진국 내에서도 최고수준이며, 2020년대 초반에는 재정과 경상수지가 동시에 적자가 되는 ‘쌍둥이 적자’에 빠질 공산이 큼
 - 경상수지가 적자로 바뀌면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재정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
 - 소비세율을 10%로 끌어올리는 것만으로는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재정을 흑자로 바꾸지 못함
 - 결국, 경제회복을 노린 재정정책은 한정적으로만 시행되어야 함

③ 신성장전략은 어떠한 발상으로 가져가야 하나?

□ 건강·의료산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 향상에 중점

- 예측에 의하면, 의료·간병 분야 종사자 수가 2025년에는 1천만 명 정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, 그때의 예상 노동인구가 6,100만 명 정도이므로, 결국 여섯 명 중에 한명이 의료·간병 분야에서 일하게 됨
- 그러나, 의료·간병 분야는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가 제조업이나 기타 비제조업의 2/3 정도에 지나지 않아 의료·간병의 고부가가치화가 절실
 - 일본은 기계 산업에 강점을 갖고 있음에도 의료기기에 한해서는 일본 국내시장의 약 절반을 수입품이 차지하고 있으며, 6천억 엔 정도의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

- 장기간의 심사기간, 고액의 심사수수료 등 심사시스템의 문제가 거론되는 바, EU나 한국과 같은 유연한 심사제도로의 개혁이 필요함
- 의료 기기 뿐만 아니라 IT나 로봇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1인당 부가가치를 높여야 일본경제의 성장으로 연계될 수 있음

□ 「절전」 사업화의 필요성

- 일본의 화석연료 수입은 가격상승과 원자력발전 축소의 영향으로 2000년 7조 엔에서 2011년 20조 엔으로 급증
- 가정과 사무실에서 사용량을 실시간 확인 가능하도록 하는 ‘차세대 전력계’ 도입을 추진하여 절전을 산업화할 필요성

□ TPP(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) 가입으로 ‘규제개혁을 통한 시장창출’ 기회로 살릴 필요

- 일본 국내외의 룰(rule)을 공통화 함으로써 해외로부터의 일본 투자를 부르고, 일본 제조업의 해외유출을 막아내는 효과를 창출할 필요

□ 시사점

-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정부에 의한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은 제한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, 결국 ‘민간에 의한 시장창조’가 일본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음

- 일본 내에서도 공격적인 금융 및 재정 정책을 추구하는 아베노믹스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, 일본정부가 어떠한 정교한 정책을 가지고 아베노믹스를 추진해 갈지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함
- 현재 ‘아베노믹스’는 엔저 등을 통해 한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
- 일본 정부에서 6월까지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성장전략을 발표할 예정인바, 우리나라도 창조경제, 신산업창출 등 유사한 고민을 안고 있으므로 일본의 성장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
- 일본의 경우, 지난 7년간 총 7개의 성장전략이 만들어졌는데, 이번에는 일본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성장전략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자국 내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고 있음
- 또한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노동시장을 어디까지 개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

<참고 자료>

닛케이신문(2013.4.8)